

소득주도 성장정책은  
성장정책이 맞다

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

## 발제문의 주요 주장

- 명칭이 동어반복적이라는 문제
- 분배문제는 심각하지 않음. 노인빈곤, 청년실업이 문제.
- 기존 성장이론과의 관련성은 있으나(인적자본 축적) 성장이론이라기보다는 승수효과를 노리는 단기경기부양책임.
- 정책 관련, 공무원 고용 확대 정책은 승수효과와 관련이 없고,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노인빈곤,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.
- ->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임.

## 명칭이 동어반복적?

- 경제학에서는 총소득이 총생산이므로 동어반복적이라 느껴질 수 있음.
- 원래는 기능별 소득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임금주도성장으로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임금을 포함한 가계소득 전체, 시장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으로 확장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제시.
-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음은 인정. 그러나 현재 명칭보다 더 나은 네이밍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.

## 분배문제는 심각하지 않은가?

- 공식적인 통계는 OECD 평균의 지니계수를 보이는 것이 맞음.
-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는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의 불평등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임(김낙년, 김종일, 2013). 계층별 소득분배뿐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도 계속 하락해 옴(전수민, 주상영, 2016)
- 기능별 소득분배, 계층별 소득분배가 악화돼 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임(OECD 최상위권). 8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왔음.
- 저임금근로자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됨. 청년계층이 저임금, 비정규직 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임. 그러나 단지 청년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므로 청년실업을 포함하여 크게 볼 필요.

##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다?

- 장기 성장은 공급측면에 의해서, 단기 변동은 수요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요한 가정. 원칙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음.
- 분배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, 즉 장기성장의 요인인가가 중요한데, 분배 상태의 개선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함. (Saint-Paul and Verdier(1993), Galor and Zeira(1993), Perotti(1993), Banerjee and Newman(1993), Aghion and Bolton(1997) Perotti(1996), Alesina and Perotti(1996)등)
- 분배개선이 저소득층의 인적자본투자 촉진, 사회통합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. 기존 성장이론과의 관련성.

- **소득주도성장론**은 기존의 성장이론의 경로(공급측면이 성장 결정, 소득분배개선은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성장에 기여 가능) 이외에 “분배의 개선-> 수요 증가-> 공급 확대->성장 유도”라는 경로 상정
- 첫째, 신고전파의 분배이론과 다르게 분배는 생산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.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노동시장제도가 중요(정규직 확대, 낮은 노조조직률이 저임금노동자 양산). 즉 **정책적 개입을 통해 분배조정 가능**.
- 둘째, 노동소득분배율의 확대는 소비증가, 투자및순수출감소를 야기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경우 **총수요 확대->총공급, 총생산 확대**를 야기함.

- **총수요 증가-> 성장에 장기적으로 기여가능**

- 

- 총공급은 총요소생산성, 노동량, 자본량으로 분해 가능. 이 세 요소에 대해 기존의 성장이론은 장기에는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가정. 또한 장기간 균형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정.
- 그러나 심각한 체감 실업(공식적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)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은, 현재의 고용상태가 장기간 균형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,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라는 경제이론의 진단과 동떨어진 것임.
- 체감 실업의 문제는 우리 경제에 유향인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수요 확대를 통해서 고용과 생산을 늘릴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. 증가한 고용과 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 성장을 의미하는 것임.

- 정부무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동시에 창출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. 단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임.
-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당연히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(거우 잔차로 계산), 정확히 어떠한 정책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.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 감소로 상쇄될 가능성도 존재.
-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시키고 R&D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. 규제완화와 같은 친기업적 정책의 효과도 마찬가지. 독일과 같이 노사협조가 잘 되는 국가가 제조업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제도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향후 활발해져야 함.



-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전략은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일자리경제, 소득주도성장, 공정경제, 혁신경제라는 네 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경제, 혁신경제가 공급측을 자극하는 전략으로, 일자리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수요측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즉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소득, 가계소득, 서민 및 중산층 소득 증가 등 분배개선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혁신이나 생산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함.
- 공급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급측면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측면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것임.

## 실제 정책으로 실현 시, 주의가 필요

- 현재 가계소득확대를 위해 최저임금,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고 있음. 방향은 맞으나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야기될 수 있음. 한편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개선,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 증가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.
- 최저임금, 비정규직이 영세 자영업, 중소기업에 더욱 만연하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함. 따라서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재정을 동원하여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책도 필요함.
- 또한 인건비가 인상되는만큼 더욱 높은 생산성이 발휘되도록 혁신성장과 잘 결합되어야 할 것임.